광주·전남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실태 분석

농사 짓지 않는 휴경지서 '변동직불금' 타내

전남 104명 중 80%이상 관외 경작자

부정 수령 문제되자 자진 반납 하기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3일 지역 공직자 쌀 직불금 실태 조사를 마감한 가운데 부당 수령자로 드러난 124명 대부분은 본인과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지않으면서도 직불금을 타내는 등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전남지역 부당 수령 공무원 104명 가운데 80% 이상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살지않는 관외경작자였으며, 광주시의 경우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휴경지를 바탕으로 혈세를 타낸 것으로 판명됐다.

◇**부당 수령 실태**=광주시 본청을 비롯한 5개 구청에서 모두 20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으며, 부당 수령액은 1천800만원에 달했다.

부당 수령자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를 소유하면서 쌀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는 '변동직불금'을 받았다.

광주의 부정수령액(2005년~2007년 수령액)을 합산한 결과 규모가 큰 것은 325만원이었고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나주시에 27필지의 농지를 소유해 360만원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자 자진반납했다.

가족들이 공무원 명의의 땅을 제 3자에게 빌려준 뒤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도 공무원 A씨는 수년 전에 취득한 고향 지역의 논 1ha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 준 뒤, 지난 2007년에 부인 명의로 10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전남지역 부당 수령 공무원 104명 중 대다수가 이 같이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토지를 취득한 뒤, 경작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한 공무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 1.5ha를 영농법인에 맡기는 대신 직불금은 매년 자신이 수령했다. 또한 이 공무원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대신 경작자의 임대료에서 직불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감해줘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수법을 사용했다.

C군의 한 간부는 상속받은 논을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줬으나 직불금은 부모 명의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정부가 지난 10월 22일 확정 발표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부당 수령액은 모두 환수된다. 검찰이 부당수령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처벌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단행된다. 현재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징계대상 비위유형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가지.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이들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실제 조사결과 공무원이 과실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경징계보다는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무원 명의의 땅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논란도 예상된다.

/채희종·윤영기기자 penfoot@

현역 4명·기초장 2명·광역의원 24명

민주당 직불금 부당 수령 명단 공개

민주당은 3일, 전남도의회 의원 3명을 비롯 본인 또는 가족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과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남도의회에서는 Y의원, J의원, 또 다른 J의원 등 3명이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 없이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도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어 당 차원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은 진천군수(민주당)와 보은군수(자유선진당) 등 2명, 광역의원은 전남도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조사됐다"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감사원에서 제출한 28만3천47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7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서울 강남과 송파, 서초 지역 거주자는 189명으로 이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3천800여만 원, 농지면적은 32만5천500㎡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직자 중 관외거주자로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다"며 "이들이 고위공직자나 지도층의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6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국가 경쟁력·주민 편의 위주 개편을 시·도 폐지는 광역주의 추세에 역행"

■ 지방신문협 '지방행정체제 개편' 포럼 내용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와 대응전략' 포럼에서는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치권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안돼**=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행정 자치계층과 구역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당리당략과 개인적 야망에 의해 왜곡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료들의 이익 혹은 지역 유지들의 이해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 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 그리고 주민 편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도 "중앙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갈등이 격화돼 전국이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광역시·도 폐지 반대**=김 실장은 "국가가 광역지방정부에 본연의 역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할 국가지방행정청을 신설할 경우 지방정부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려 지역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도를 폐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배양해온 사회자본을 파괴하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주의 추세에 역행한다"며 "도는 단순히 존속하는 차원을 넘어 도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광역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층제 도입은 신중해야**=김 실장은 "정치권이 지적하는 지방행정 비효율과 중복행정의 폐해는 광역시도와 자치 시군구로 이뤄진 중층제로부터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기존 법령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70개 전후의 통합시정부가 국가와 직접 연결될 경우 중앙집권이 오히려 심화된다"고 단층제 도입에 신중해야 함을 역설했다.

◇**절차적 체계를 갖춰 진행해야**=육 교수는 "행정구역개편 준비단계에서 정부가 근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법을 정비한 후 이를 추진할 독립성이 강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 박지경기자 jkpark@

해외연수비 예산 심의 '이중 잣대'

광주시의회, 명퇴 공무원 연수비는 살리고 교육청 연수비는 깎고

광주시의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불필요한 경비삭감 방침에도 불구 해외연수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심의를 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년도 광주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벌여 '해외 선진행정연수'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 8천400만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명예퇴직·공로연수 공무원(35명)들의 해외연수비용 2억1천만원, NGO임원 선진지비교연수인솔비 200만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같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가 공무원 해외시찰·견학 등의 명목으로 편성한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비', 소방안전본부가'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명목으로 편성한 예산, 시교육청의 해외연수 경비 16억7천만원은 절반 정도 삭감했다.

시의회가 파악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견학·참관 등으로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모두 6억2천여만원. 이 가운데 정작 삭감한 예산은 4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시의회가 열악한 재정형편, 지역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광주시의 '불필요한 해외 시찰·견학·연수비'에 대해 최대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도가 비슷한 사업에 대해 엇갈린 심사를 했다는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생색내기'성 삭감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나마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비, 선진행정도시 비교연수의 경우 같은 명목인데도, 절반씩만 '칼질'하는데 그쳐 시민 혈세(血稅)를 놓고'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